

보도시점 2025. 12. 30.(화) 16:30 배포 2025. 12. 30.(화) 16:30

##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추진 방향과 공론화 방안 논의 본격화

- 지급 범위, 재정 확보 방안 등 연구 용역과 워킹그룹 통해 단계적 검토 추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2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추진 방향 설정 안건과 함께 공론화 추진계획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워킹그룹 구성이 이루어졌다.

특위위원들은 향후 본사업 전환을 대비하여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의 설정 기준과 적용 범위, 현재 4:3:3인 국비와 광역·기초지자체의 재정 분담 비율 개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방향은 연구 용역을 통해 모색하고, 특위 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워킹그룹은 학계 및 연구기관에 속한 기본소득특위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논의된 주요 쟁점과 검토 결과는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사업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 취지

와 효과,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의 충분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론화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공론화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해 농어촌 재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다”며, “공론화와 심층 논의를 통해 국민 이해를 높이고, 본사업 정책 방향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어촌정책팀	책임자	팀 장	엄성준 (02-6260-1221)
		담당자	사무관	이서윤 (02-6260-1225)